

2023  
하반기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기여하는  
대외경제 연구기관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2023.07.03.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부균	01
2023.07.06.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태현	03
2023.07.06.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정책 시사점	한원태 외	05
2023.07.07.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訪美) 성과와 시사점	김정곤 외	07
2023.07.07.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한나	09
2023.07.13.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강부균 외	11
2023.07.24.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이주관 외	12
2023.08.03.	캄보디아 2023년 총선 결과와 정치·경제 전망	정재완 외	14
2023.08.10.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최원석 외	16
2023.08.10.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오지영 외	18
2023.08.10.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김승현 외	20
2023.08.11.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의 동향과 전망	이천기	22
2023.08.30.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남유진	24
2023.09.01.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외	26
2023.09.01.	최근 영국의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배경과 전망	임유진	28
2023.09.08.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보람 외	29
2023.09.12.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김도연 외	31
2023.09.12.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최장호 외	33
2023.09.15.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	김혁황 외	35
2023.09.19.	G20 뉴델리 정상회담과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김경훈	37
2023.09.25.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형곤	38
2023.09.26.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이재호	40
2023.10.10.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확대 요인과 시사점	신민이	42
2023.10.10.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이규엽	44
2023.10.11.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민지영 외	46
2023.10.18.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최재희	47
2023.10.24.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문진영 외	49
2023.10.27.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다각화 정책과 한국의 기회	유광호 외	51
2023.10.31.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장영욱 외	53
2023.11.01.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이주영	55
2023.11.0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김경민 외	57
2023.11.06.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김혁중 외	59
2023.11.14.	2024년 세계경제 전망	안성배	61
2023.11.16.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박진희 외	63
2023.11.21.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이주영 외	65
2023.11.27.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지현 외	67
2023.12.06.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은미 외	69
2023.12.08.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김정곤 외	71
2023.12.20.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덕 외	73
2023.12.22.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김종덕 외	75
2023.12.26.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노윤재 외	78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 ◎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33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National Recovery Plan)에서 제시한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에 달해 재건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및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재건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고도의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발 빠른 연대와 협력이 긴요함.
  - 2022년 7월, 2023년 6월 두 차례 개최된 재건 관련 국제논의의 장이자 협력 플랫폼인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통해 재건 원칙과 방향, 세부 과제에 대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건의 주요 쟁점은 △언제(when), 어떤 속도로(how fast) 추진할 것인가 △어디에(when), 어떤 분야(what)에 초점을 둘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who directs)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who pays)로 요약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재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관련 논의와 자금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본격 추진될 재건사업에 대비해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 EU 집행위원회는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추진에 대응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U의 첫 번째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함('23. 6. 20).
- ◎ 세 가지 우선순위(① 촉진 ② 보호 ③ 협력)에 근거한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험 식별 및 관리] 경제분야와 연관된 위험(△공급망 복원력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기술 안보 및 유출 △경제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험 등)을 신속히 식별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복원력 제고 및 공급망 강화] EU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EU 산업전략, 「핵심원자재법」, 「유럽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유럽방위기술 및 산업기반 전략, 단일시장긴급조치 등의 신속 이행과 유럽플랫폼 전략기술(STEP)을 통한 자원조달 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제안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FDI Screening)에 대한 재검토,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통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에서 EU를 보호하고자 함.
  - [경제안보 협력] 경제안보를 둘러싼 정책대응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국가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함.
- ◎ EU 경제안보전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함.
  - EU 경제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한 완전한 배제가 아닌 위험 최소화'라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재검토 등은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라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
  -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의 정의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권한 조정 △경제안보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화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됨.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EU 경제안보전략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EU 정부간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정책 시사점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anwontae@kiep.go.kr, 044-414-1358)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ysjeong@kiep.go.kr, 044-414-1141)

**임희동**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hdlim@kiep.go.kr, 044-414-1223)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 2023년 6월 29일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통화스와프는 달러 기반(달러-원/엔)이며, 규모는 100억 달러임.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의미]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 금융시장 불안 시 시장 안정에 일조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양국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역할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갈등이 경제, 금융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됨. 이번의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는 두 국가간 금융협력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로 주요 국제통화 발행국과의 통화스와프 대상이 4개국(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국통화-달러 기반 스와프로 체결됨에 따라 비상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강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발표되어 금융시장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정책 시사점

- ◎ [정책 시사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복원됨에 따라 향후 양국 금융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외환·금융 분야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며,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 금융거래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과거 한·일 간 통화스와프 사례를 통해 볼 때,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스와프 체결 통화가 원/엔 자국통화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안정망이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사례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거래 확대] 한·일 간 금융투자 확대 등 양국간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금융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바, 한국의 사무라이채 발행 및 일본의 한국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訪美) 성과와 시사점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044-414-1093)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2024년 총선을 앞둔 인도 모디 총리는 방미(訪美)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 △전략산업기술 확보 △안보 확충 △국제적 지위 강화의 목표를 달성함.
  - 4박 5일 일정 동안 모디 총리는 미국정부의 환대 속에 정계, 산업계, 학계의 주요 인물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함.
  - 미국은 모디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 아시아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고화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인도인의 지지를 끌어냄.
- ◎ 이번 모디 총리의 방미를 통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인도가 협의 중인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계획이 다수 발표됨.
  - [방산] 인도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해 무기체계를 다변화하고 방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확보함.
  - [첨단기술·공급망] 미국과 인도는 ‘전략산업’으로 불리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함.
  - [에너지·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투자, 원조, 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과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력·보건] 인구 대국인 인도가 직면한 인력 개발, 보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은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訪美) 성과와 시사점

- ◎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인도의 유사입장국 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도 대인도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인도의 전략산업과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규모가 큰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로써 인도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국가임이 확인됨.
  - 인도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평화 유지와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대인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한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leehn@kiep.go.kr, 044-414-1288)

- ◎ 중국해관총서는 지린성이 2023년 6월 1일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중계항(이하 내륙 중계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중·러 간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러 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발표되어 그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음.
  - 이로써 항구가 없는 동북지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내 물류 이동의 중계항으로 이용함에 따라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해상 운송이 가능해짐.
  - ‘내륙 중계항’은 중국 내 물류 이동 시 빌려 사용하는 외국 항구를 의미하며, 국내 물류 이동과 동일하게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 중·러 간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는 중국에는 동북지역의 물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며, 러시아에는 러·우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중국 지린성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함에 따라 기존 물류 노선보다 운송비용을 절감(컨테이너당 약 2,000위안)하고 운송시간을 크게 단축(약 2~4일 단축)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물동량 증가와 중·러 간 해상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러·우 전쟁으로 서방과의 경제 및 무역 거래가 차단되면서 러시아 서부에 집중되었던 물류망을 극동지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지린성이 내륙 중계항으로 사용했던 북한 나진항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블라디보스토크항이 나진항을 대체하는 동해 출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러 블라디보스토크 내륙 중계항 이용 합의의 주요 내용과 전망

- ◎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략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러 간 운송, 에너지, 곡물 분야 중심의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그동안 러시아는 극동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왔으나,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향후 경제·군사·국제 문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한편 향후 블라디보스토크가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044-414-1242)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044-414-1507)

- ◎ 2023년 7월 9일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결과, 현 대통령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자유민주당 후보가 87.0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집권 3기에 성공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4월 30일 90.2%의 찬성률로 신헌법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권력과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함.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0년까지 GDP 2배 확대 및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월 ‘2022~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약은 동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 이에 3기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 ◎ 공약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함.

  - △산업 고도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 △인프라 개선 △금융시스템 개혁 △민간부문 비중 확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농업 발전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에 따라 집권 3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됨.

  - 광업,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한 상호호혜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그린·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농업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044-414-1089)

김민성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044-414-1113)

- ◎ 본고에서는 무임승차와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제시된 G7 기후클럽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논의 참여 방향을 검토함.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며, 한국은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밝힘.
  - 2023년 5월 합의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기후클럽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G7 이외의 국가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COP28('23년 11월 예정)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CBAM, IRA 등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안으로서 기후클럽이 논의됨.
  - 기후클럽 내에서 탄소중립 목적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화와 무역장벽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음.
  - 클럽은 파리협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수국간 협력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바와 같은 '회원국에 대한 정량화된 의무 부과 및 비참가국에 대한 무역 제재(탄소국경조정, 관세)를 통한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의 해소' 없이는 클럽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함.
- ◎ G7 기후클럽은 탄소중립 관련 네 가지 가입 조건과 세 가지 활동 분야를 핵심으로 함.
  - 클럽 가입을 위한 참가국의 의무사항: 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 ②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이를 반영한 NDC 설정 ③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④ 기후클럽을 위한 협력과 홍보 활동
  - 주요 활동 분야: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 선도 ②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③ 기후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 ◎ 기후클럽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 클럽 참여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와 혜택, 비참가국과 위반국 제재 방법 등이 향후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현재 기후클럽의 목표는 부문별 저탄소 전환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 형태의 최저 탄소가격제, 국제 탄소가격제, 저감목표 상향이 통상규범과 파리협정의 CDBR 원칙에 부합하게 도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 기후클럽 가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한 혜택의 제공 가능성, 비참가국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 도입 가능성이 논의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 ◎ 탄소배출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대응해야 함.
  - 기후통상규범 및 표준 형성 과정에 참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산업별 저탄소화 협력, 수소생태계 및 저탄소 상품의 시장 확보, 탄소중립에 필요한 클럽 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후정책 고도화를 통한 정책의 상호인정 및 CBAM의 면제 가능성 등이 기대됨.
  - 2030년 이후의 NDC 목표 추가 상향, 주요 논의 대상인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 분야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탄소감축을 위한 가격/비가격 제도 도입은 국내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캄보디아 2023년 총선 결과와 정치·경제 전망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 ◎ 2023년 7월 23일 치러진 캄보디아 제7대 총선 결과, 제1당이자 훈센(Hun Sen, 70)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전체 의석수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 인민당의 압승은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는 당 조직력과 정국 장악력 △유력 야당 배제와 선거법 개정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산층과 지지층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선거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임.
- ◎ 본 선거에서 나타난 인민당의 높은 득표율은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Hun Manet, 45)의 총리직 승계를 위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인민당은 2018년 제6대 총선, 2022년 지방선거(코윈 평의회) 승리에 이어 제7대 총선에서도 압승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함.
  - 총선 직후 훈센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장남 훈마넷에게 이양할 계획’임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의 높은 지지율은 당 내외적으로 총리직 세습에 대한 이견과 분란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8월 말 등장할 훈마넷 신정부는 아버지 훈센 총리의 정치·경제·사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훈마넷의 총리직 승계와 함께 캄보디아 주요 지도층 자녀들인 일명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승계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 구성도 예상됨.
  - [경제] 신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캄보디아를 위한 ‘5대 기본 정책 2023~2028(Five Primary Strategic Goals 2023-2028)’과 새롭게 수립 중인 ‘오각전략(Pentagon Strategy)’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2023년 총선 결과와 정치·경제 전망

- ◎ 이번 선거가 캄보디아의 정치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한·캄보디아 간 협력전략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정부는 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최원석**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장 (morganmoon@kiep.go.kr, 044-414-1189)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044-414-1272)

- ◎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초 중국은 경제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 및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하는바, 추가 조치에 대비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은 4월 「반간첩법」 개정 및 6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뒤 7월부터 시행 중이며, 7월 3일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8월 시행)를 발표하는 등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추진 중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응조치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미·중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
  -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행위를 대상으로 국가 기밀정보에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데이터 및 자료까지 포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처분 권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간첩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
  - 「대외관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대외관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대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 국가 안보·이익 수호와 국제의무 이행을 위해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을 금지·제한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이후 군사장비·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시행

##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 ◎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법제화에 관한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대응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유형별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
  - 「반간첩법」 개정으로 인한 간첩행위 확대로 중국 내 문서·데이터 등의 관리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
  - 미·중 갈등 첨예화에 대비하여, 중국의 「대외관계법」에 제시된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과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다자협의체 참여, 비배타적 대외전략 추구가 필요
  -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에 속하는 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들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오지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부연구위원(gyoh@kiep.go.kr, 044-414-1270)

박소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연구원(sojeong@kiep.go.kr, 044-414-1241)

- ◎ 최근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비전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평화구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세계평화지수(GPI: Global Peace Index)는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UN, OECD DAC 등 주요 국제기구는 ‘분쟁’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 KIEP가 실시한 2022년 국제개발협력 국민인식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 동기 2위가 세계 평화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원조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음.
- ◎ 국제사회는 주로 국가별 다면적 취약성 분석과 HDP Nexus 접근을 토대로 분쟁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2%를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취약성은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 재난 위험, 대응역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별 특수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세계은행, OECD DAC, EU는 각 기관의 분류기준에 따른 취약국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지원받은 상위 5개 수원국은 아프가니스탄·콜롬비아·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였음.
  -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에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한 상위 5개 공여국은 미국·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이었음.
- ◎ 한국은 분쟁취약국 지원목표를 포함한 취약국 지원전략 및 유관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체 ODA의 약 1%를 개발도상국의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지원에 활용함.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분쟁,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규모의 ODA를 지원한 상위 5개 수원국은 앙골라·인도네시아·베트남·엘살바도르·라오스였음.
  -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INCAF)에 참여해 왔고 취약국 지원 전략, 인도적 지원 전략, 다자협력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여 분쟁취약국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 ◎ 국제사회의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과 맞춤형 접근을 병행하고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개발·평화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HDP Nexus 접근을 활용하여 개발·평화 ODA를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노력 간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분쟁, 평화 및 안보 부문 ODA 지원 비중이 낮고, 분쟁취약국과의 협력 비중도 낮으므로 분쟁취약국을 타기팅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shkim@kiep.go.kr, 044-414-1035)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wjson@kiep.go.kr, 044-414-1287)

- ◎ [주요 정책]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국채와 위험자산 매입 확대 및 금리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정책 도입] 2013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본원통화량 2배 확대(양적완화), 위험자산(ETF 및 J-REIT) 매입 확대(질적완화) 등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함.
  -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 확대]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경제 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가 일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마다 국채, 위험자산 등의 매입을 확대함.
  - [YCC 도입] 2016년 9월 국채 매입 등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단기금리는 -0.1%로 고정하고 장기금리는 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단기 금리조절 정책을 실시함.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ETF·J-REIT 매입을 확대하고 다시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며, 코로나19 대응 자금유통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함.
  -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금융완화정책을 확대·지속해 오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금리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23.7 기준 +0.6%).
- ◎ [일본경제 현황 및 정책 평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임금인상 등 국내수요를 진작시킬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일본은행이 의도한 수요건인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
  - [투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금융완화정책 추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정작 기업들은 일본 국내에서의 투자 증대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고용] 취업자 수의 증가는 주로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임금 인상도 연평균 1%를 하회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금융·재정]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정책은 국채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한편 국채의 이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방대한 국채·ETF 매입으로 일본은행의 자산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향후 출구전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결론] 일본은행은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지만 의도한 총수요 증대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실물 및 재정·금융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짐.

- 일본은행은 수요 진작을 통한 2% 물가상승 및 일본경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지만 사실상 이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장기침체 기간 동안 위축된 민간부문의 심리를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등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초기 목표에 고착함에 따라 정책이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 등이 나타남.

◎ [향후 전망]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대량으로 매입한 국채 및 위험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인상 시 재정리스크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의 동향과 전망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leec@kiep.go.kr, Tel: 044-414-1361)

- ◎ 2022년 5월 23일 출범 이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은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IPEF는 (i) 무역 (ii) 공급망 (iii) 청정경제 (iv) 공정경제에 관한 네 개의 ‘필라(pillar)’로 구성되며, 2023년 5월 27일 네 개 필라 중 필라 2에서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됨.
  - IPEF 노동기준은 네 개 필라 모두에 반영되나, 필라 1에 가장 구체적인 노동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이나, 이를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음.
  - IPEF가 보호하는 노동권에는 ILO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강제노동·아동노동 철폐,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에 더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국제 노동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구비 여부뿐 아니라 노동의무의 실효적 이행 여부가 중요함.
- ◎ IPEF 노동기준이 기업의 특정 생산과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가 필라 1 논의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IPEF 노동기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장 단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국가’가 규제대상인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IPEF 노동기준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음.
  - 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12개 IPEF 협상 참여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현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의 동향과 전망

- ◎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평등 포함) 등 최근의 무역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하는 작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
  - 산업 차원에서는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 노동기준 준수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강조하는 ‘노동’과 ‘해양수산’ 이슈가 접목되는 사안을 식별하여 IPEF 협상과 한·미 FTA 이행 차원에서 대비하고,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인도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오늘날 인도 인구의 35% 이상이 △빈민가 문제 △대중교통 부족 △상하수도 처리시설 부족 등 기초 인프라가 열악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인도의 도시 거주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4억 8천 명이며, 2050년에는 약 8억 7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11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 인도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 인도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핵심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은 인프라 관리, 사회적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해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인도정부는 이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
- 스마트시티 미션은 도시 개발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스마트시티 개발 분야는 △교통 △에너지·환경 △수자원·위생 △주거 △경제 등이며, 2023년 8월 기준 총 7,742개의 프로젝트 중 6,019개가 완료됨.
- 향후 인도정부는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가적 미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해 △북동부 지역 개발 △그린·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같은 대형 인프라 원조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인도 ODA 주요 협력 분야인 '그린·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도 스마트시티를 연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 △민관 협력 조직 신설과 같은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044-414-1045)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 ◎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회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함.
-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에 합의된 경제 관련 협력방안은 크게 △3국 협력 제도화 △개발협력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력 제도화] 3국은 정상회의와 4개의 장관급회의의 연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안보 이슈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포괄적 범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개발협력] 3국은 개발금융기구간 공조 확대, 개발정책대화와 같은 개발협력 협의 채널을 통해 인태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경제협력] 3국은 △경제안보대화 운용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신흥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표준 등 첨단 핵심산업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글로벌 이슈] 3국은 보건 분야와 인적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함.
- ◎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와 국방·외교·산업·경제협력 부문 장관급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3국간 협력체계의 제도화, 한국의 미국 주도 인태지역 3자 소다자협의체 정식 참여, 국방·외교·산업·개발협력·금융 등 포괄적 범위에서 3국간 협력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 3국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의 주요 대상품목인 핵심광물에 대한 미·일과의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자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미·일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확보 중인 핵심광물 개별 프로젝트 정보를 더욱 긴밀히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MSP 차원에서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간 핵심신흥기술(CET) 공동개발 및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부처 실무 대응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국간 산학연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의 유관부처에 상응하는 한국 내 실무 대응조직의 조속한 구성 및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 ◎ 아울러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미·일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영국의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배경과 전망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yjlim@kiep.go.kr, 044-414-1064)

◎ [통화정책회의 결과]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가 2023년 8월 2일(현지시간) 0.25%p의 기준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영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됨.

- MPC는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 대비 하락했으나, 높은 임금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금리인상을 결정함.

◎ [배경]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로 에너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나,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6.9%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함.

-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에너지, 식·음료품 외에 건강, 숙박·요식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나타남.

-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7.4%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품과 달리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특히 서비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명목임금(성과급 제외)이 2023년 6월 7.8% 상승하면서 통계집계(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이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요-공급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어 임금상승률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전망] 향후 영란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영란은행이 높은 임금상승률과 서비스 물가상승률 하락세 정체로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2%) 도달 시점을 2025년 2/4분기로 늦춤에 따라 금리인상은 2024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경제의 성장 정도와 물가 안정화 속도 여부, 고금리에 대한 가계 부담이 향후 정책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brlee@kiep.go.kr, 044-414-1045)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wjson@kiep.go.kr, 044-414-1287)

- ◎ 2023년 7월 28일 일본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분야 총괄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함.
  - 탈탄소를 둘러싼 세계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GX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함.
- ◎ 'GX 추진전략'은 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GX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연료/CSS,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의 연료·원료 전환 △운송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GX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① GX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선행 투자지원 ② 탄소가격제 강화 ③ 새로운 금융수단 활용 등을 제시함.
  - 기후변화가 세계 공통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국제협력을 주도해나갈 방침이며, 그중 하나로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구상을 제안함.
  - 일본 사회 전반에서의 탈탄소 실현을 위해 △공정 전환 △수요 창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 일본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GX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와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됨.
  - 한편 일본 'GX 추진전략'의 한계점으로 △GX 경제이행채 상환가능성 불투명 △탄소가격제의 강제성 및 저감효과 부족 등이 지적됨.

##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일본의 이행금융 및 탄소부과금 사례는 탈탄소 추진과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GX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 밖에도 △국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 △일본 GX 전략의 보호주의적 요소 검토 및 대응 △양국간 에너지 안보 공조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진행 △개발협력 확대 등을 제안함.



#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kykim@kiep.go.kr, 044-414-1257)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044-414-1057)

- ◎ 인도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 (non 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고, 8월 19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품목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파쇄미(broken rice), 설탕, 밀, 밀가루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쌀과 양파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제한조치를 결정한 것임.
- ◎ 인도정부의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시기후로 공급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인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인도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개월 만에 최고치인 7.4%를 기록함.
- ◎ 이번 인도의 쌀 수출 금지조치는 지난해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2017~21년 평균 1억 8,00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그중 59%를 수출했고, 밀의 경우 같은 기간 1억 300만 톤을 생산하고 그중 8%를 수출함.
  - 엘니뇨 영향으로 작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쌀 수출 제한까지 더해져, 7월 FAO 국제 쌀 가격지수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는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네팔과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베냉,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인도산 쌀 수입 비중이 높아 해당 국가의 식량안보 위험을 확대하고 있음.
- ◎ 인도의 수출 제한조치는 하반기에 새로운 수확물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 ◎ 한편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품종 개발, 농업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인도의 농업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다수확 작물 개발 △관개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인력 훈련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최장호** 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이희선**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leeheesun@kiep.go.kr, Tel: 044-414-1041)

## ◎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화답하였음.

## ◎ 북일 대화에서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위협 제거’,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전쟁 배상금 지급’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

- 일본은 ‘납치자 문제, 일본 영토와 근해를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문제, 비핵화 협상 재개, 다른 나라에 지급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전쟁 배상금 지급,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과거사 사과, 전쟁과 식민 지배를 포괄하는 식민지 배상금 지급, 재일본 조선인의 지위 보장,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핵심 의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일본은 추가 협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관련 협의와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배상금 청구 규모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20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50억 달러 수준을 배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함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상금 규모는 현재 가치로 최고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 일본은 식민 지배가 아닌 2차대전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50억 달러 수준이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1970년대 북한이 상환하지 못한 대일 무역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추가로 일본이 북한에 1960~70년대 북송사업 손해 배상, 2006년 대북제재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북일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북일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현행 UN 대북 제재하에서는 배상금 지급이 어렵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한 상태여서 양측이 일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함.



#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

김혁황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kim@kiep.go.kr, 044-414-1135)

강준구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044-414-1058)

- ◎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것에 더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급증과 함께 CBAM도 2023년 10월 전환기간 시작 후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일반 요건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화력 발전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별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량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시설 확충과 환경 무역규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매칭 등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이 제조업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제조업 전체 전력 소비의 약 50%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화학물질·화학제품, 1차 금속이 차지하며, 1차 금속에서 생산 단위당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원 이용 전력 생산이 2013~22년 동안 연평균 16.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56TWh)에 불과함(화석연료 60.4%, 원자력 29.6%).
-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발전원별 전력 사용 현황 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총 전력은 167TWh이며 이 중 69.1%에 달하는 115TWh의 전력은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임(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비율은 5.8%(9.6TWh)).

  -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30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외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섬유제품 수출품 생산에 각각 약 15T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

## 수출품 생산을 위한 발전원별 전력 수요 현황 및 시사점

- ◎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개선,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발전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술 개발 촉진, 국제사회에서 공동 이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및 공동대응 강화, 한-EU 간 대화창구 활용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이 손쉽게,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원 국제가격 변동과 환경 규제 확산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 도모를 위한 국내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중장기 플랜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G20 뉴델리 정상회담과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포괄적인 안건을 담은 공식선언문이 회원국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발표됨.
  - 주요국의 경제적·외교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으로,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공식선언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3건의 협의 내용과 39건의 부속서류를 담은 광범위한 공식선언문이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중 조기에 발표됨.
- ◎ 인도정부는 G20 차원에서 합의된 특정 안건과 소다자간·양자간 협력방안 마련을 주도함.
  - 뉴델리 공식선언문에는 인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이 요구해온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 △국제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공공인프라의 국제적 확산과 관련한 추진 방안이 포함됨.
  - 인도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과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 등 소다자간 협력체 설립에 참여했으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차기 G20 의장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도는 한국 등 뉴델리 정상회담에 참석한 여러 국가와 양자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미국과는 2023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논의한 △기술 △반도체 △통신 △방산 △우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함.
- ◎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양자간 협력전략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방산 △우주 △정보통신 △전자 △바이오 △디지털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와의 산업 및 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내 생산기지 확충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도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소다자간 협력체 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도와의 삼각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도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hgjeong@kiep.go.kr, Tel: 044-414-1127)

- ◎ 2000년대 이래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현저한 신장세를 거듭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교역의 허브로 부상

  -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5.66%)에서 2021년에는 18.1%(35.81%)로 확대
  - 2000년 이후 반도체 제조 기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연평균 25.08% 증가한 결과, 2021년에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서 글로벌 수입의 28.5%를 점유
  
- ◎ 2021년 기준 반도체 산업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주요국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광반도체와 실리콘웨이퍼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웨이퍼 제조공정,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CPU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
  - 한국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대만은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보완적 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 협력 강화
  
- ◎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요인

  - 또한 중국은 대만(36%), 한국(20%), 일본(6%), 미국(4%)에 반도체 전체 수입의 66%를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도 약 3,000억 달러에 육박하여 상당기간 고급 반도체 산업 제조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 그러나 중국은 이미 상업적 분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 생산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범용 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능가하는 후공정 노드에 대한 제조 능력 구축 시도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더 높은 반도체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당분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단기 내 배제 또는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중국은 범용 기술에 기반한 반도체 제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
  
- ◎ 한미일 공급망 협력 틀에서 3국의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하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
  - 한미일 반도체 산업은 상호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상호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할 필요
  - 우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도하는 미국의 다자 차원의 협력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일 상호간에 경제, 공급망, 기술동맹국으로서의 상호 위상을 다질 필요
  
- ◎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별로 De-coupling 분야와 De-risking 분야를 설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반도체 제조 허브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 제조 혁신 환경 개선에 대한 집중 필요



#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 ◎ 태국 정치권은 2006년 탁신(Thaksin) 전(前) 총리 사임 이후 친(親)탁신-친(親)군부 진영 간 갈등과 정정 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최근 개혁 성향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합류로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 구조가 형성됨.

  - 태국의 정치 지형은 친탁신 정당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친군부 진영이 경쟁하는 구조였으나, 2019년 총선에 개혁 성향의 미래당(FFP: Future Forward Party)이 등장해 친탁신-친군부-개혁 3개 진영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미래당을 잇는 전진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함.
- ◎ 2023년 5월 총선에서는 개혁 성향의 전진당이 151석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했으나 총리 선출 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의석(376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제2당인 친탁신 계열 프어타이당의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후보가 제30대 총리로 당선됨.

  - 전진당의 총리 선출 실패 후 제2당 프어타이당이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구성해 총리 선출에 성공했으며, 전진당은 프어타이당의 친군부 및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비판하며 야당으로 남음.
- ◎ 태국 신정부는 정정 불안, 성장동력 부족,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 부진 상황에서 출범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나 신성장동력 부족과 정정 불안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아세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태국 신정부는 1만 바트(약 38만 원) 전자지갑 지급, 에너지 비용 경감 등의 경기 부양책은 물론 FTA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정책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시사점

- ◎ 향후 한·태 양국은 미래산업, 친환경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협력 의제에 적극 반영하되, 양국간 범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FTA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의 FTA 협상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2022~27년 한·태 공동행동계획에 채택된 미래산업, 친환경 등을 중심으로 협력안을 지속 논의하되 범정부 대화 채널인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확대 요인과 시사점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044-414-1154)

## ◎ 최근 호주와 주요국 간에 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주요 협력 형태는 호주와 협력국 정부의 지원 아래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호주 내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협력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과 수소 관련 기술협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한국, 일본, 독일 및 영국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호주와 양자 정상회담 또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담을 통해 수소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양국 기업 진출과 이에 대한 지원도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임.

## ◎ 이러한 대호주 수소부문 협력 강화는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도입처 확보의 중요성 확대 △호주산 그린수소의 가격경쟁력 △주요 수소 수출국으로서 호주의 부상 전망 △호주정부의 적극적인 수소산업 지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충분한 수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호주가 낮은 수소 생산단가에 대규모 수출가능 물량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집중됨.
- 또한 호주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중 하나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대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수소협력 수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향후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확대 및 관련 산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투자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호주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관련 국제기관들은 호주가 2050년 전 세계 1~2위의 수소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자국 수소 산업이 2050년 연간110억 호주달러(10조 원) 규모의 GDP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함.



##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확대 요인과 시사점

- ◎ 한국은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사례를 관찰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에 따르면 한국이 주요 수소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안정된 수소도입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시 호주와 주요국 간 다양한 협력 사례를 참고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이규엽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044-414-1233)

- ◎ 국제 분업이 확대됨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므로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 통계 분석 이외에 부가가치수출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명목 가치 수출액 정보 자체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국경을 여러 번 넘는 중간재 수출에 대한 중복계산이 내재되어 있음(Johnson and Noguera 2012, 2017; Koopman et al. 2014 외 다수).
  - 무역구조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최근에 부상하는 통상 주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장기 추세 변화를 추적하면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함.
  - 부가가치수출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의 자료(예: WIOD 1995~2011년, ADB MRIO 2007~19년)를 활용함.
- ◎ 새롭게 구축한 세계투입산출표 자료(1965~2022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수출 정보를 추출하고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여 여덟 가지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 [명목 GDP 대비 수출액] 분석 기간 전체에서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세계 평균보다 높으나 '10년대에 세계 무역 개방도의 추세가 정체된 것과는 달리 한국의 무역 개방도는 감소함.
  -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수출] 분석 기간 전체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낮으나 '10년대에 세계 부가가치수출 비중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비중은 증가함.
  -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 전체 기간 중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출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부가가치수출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짐.
  - [주요 교역상대국별 부가가치수출 구성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한국)부가가치에서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나, 최근 5년('18~22년) 동안은 최종재 수출의 국내(한국)부가가치에서 미국의 비중이 중국보다 커짐.

## 한국 수출의 장기 추세와 특징: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 [제조업의 수출 비중] 수출액 기준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여도는 '70년 이후 80~90%대이나, 부가가치수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80년 이후 60~70% 범위로 축소됨.
- [제조업 기술 수준별 수출 비중]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총액에서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10년대에는 정체 현상이 나타남.
- [고기술 제조업의 교역상대국별 부가가치수출 비중] 분석 기간 전 범위에서 한국 고기술 제조업의 對미국 부가가치수출 비중(수출액 대비)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10년대부터는 50~60% 범위에서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교역상대국 간 무역 수지] '70년대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한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 수지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부가가치수출 기준으로 계산 시 무역 수지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남.



#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Tel: 044-414-1507)

## ◎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러·북 간 협력 재개 동향이 관찰되고 있음.

- 2022년 초 러·우 전쟁 발발 전후로 양측간 협력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양측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1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무역이 재개됨.
- 2023년 7월,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발표함.

## ◎ 이번 러·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군사협력,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대표단에 외교, 국방, 우주기술, 산업통상, 교통, 건설, 극동지역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군사, 경제 부문에 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북한 측 대표단의 구성과 방문지를 고려할 때, 북한 측에서는 군사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 러시아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러시아 포탄 부족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러시아는 UN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북 정상회담을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중·러 관계와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 ◎ 최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산 삼원계 배터리의 탑재량 증가에 기인함.
  - 2020년까지 10%대에 머물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3년 현재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때 유럽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한국의 점유율은 57%, 일본의 점유율은 2% 수준으로 하락함.
  - CATL, 파라시스 등의 중국기업이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에 삼원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내 LFP 배터리의 비중은 2023년 현재 3.5%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유럽 내 중국기업의 실적 중 88%가 CATL의 비중이며, CATL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 배경에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온 기업 내부적인 요인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공급 과잉 및 내수시장 경쟁 심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음.
  - CATL은 업스트림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R&D 투자 및 전구체 제조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삼원계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배터리 산업의 공급과잉으로 기업들의 재고 압박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CATL은 재고 축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열되는 중국 내수시장 경쟁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해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 ◎ 향후 유럽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 본격화, LFP 배터리 사용의 확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 증가 등이 가시화되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시장 내 한·중 기업 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 ◎ 삼원계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배터리 및 소재 분야의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우리 기업은 하이니켈을 포함한 다양한 세그먼트의 배터리에 대해 원가절감을 강화한 기술적 진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새롭게 확장되는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의 전략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업스트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외교적 협력기반을 적극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IPEF 등 다자간 논의를 통해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주도하고,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장 (jymoon@kiep.go.kr, 044-414-1274)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044-414-1234)

장한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8)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 ◎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음.
  - 그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을 ‘적응(Adaptation)’보다 강조해왔으나, 최근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담수, 식량안보, 재해 관리, 해안 및 저지대 관리 등을 우선과제로 고려하고 있음.
  - 개도국의 적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 확대가 필요하며, 양자 및 다자 기후재원의 감축 부문 편중을 개선하고 적응 비중을 높여야 함.
  -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변화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지원하는 신규 기금 설정에 합의함.
  - 2023년 9월 기업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정보공개 지침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 기상이변의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의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강화] 기상이변 관련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 [국제협력 확대] 기후 적응을 양자 및 다자 협력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안보 대응 등으로 기후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손실과 피해 논의 대응]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관련한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실익 모색이 필요함.
- [ESG 정보공시 확대 대비]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의 정보공시를 위한 TNFD 권고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향후 기업의 정보공시에 자연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상이변 대응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분석과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다각화 정책과 한국의 기회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044-414-1272)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협력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2030년이 다가올 뿐 아니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확대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노력이 확대됨.
- 특히 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물류, 전기차 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네옴시티 포함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15건의 총규모는 8,79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 2/4분기까지 6.5%의 진척률(수주 기준)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현지화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 기업의 현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중임.
- PIF의 역외 투자 측면에서는 기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및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아시아 내 첨단기술 관련 기업을 주목하는 등 투자 지역 및 분야를 다각화함.

## ◎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3개국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협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진출 경쟁이 불가피함.

- [건설 협력] 최근 우리가 수주 실적을 거둔 해수담수화, 전력망 부문에서 중국과 인도 기업의 수주도 이루어졌으며,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외한 3국 모두 수주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석유화학, 주단조 부문에서는 우리의 수주 실적이 두드러짐.
- [기술 협력]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희망 분야를 살펴보면 수소, 전기차, 디지털 등 우리의 주요 협력 분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음.
- [정부 간 교류] 중국과 인도는 각각 자국 주도의 다자협의체와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자 협력 활성화 및 협력부문 다각화를 위해 일본-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다각화 정책과 한국의 기회

- ◎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점과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금번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을 포함한 다수의 정상 및 장관급 회담, 비전 2030 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협력 채널이 공고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양자 간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규모 및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황 및 현지화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지화 기여를 약속하면 협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제에 대한 적용 완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임.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인프라 건설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의 진출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 ◎ 독일은 2022년 말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최근까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 및 구조적 측면에서 경기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망] 2023년 독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도 0.9~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원인] 독일의 경제침체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등 공급 요인과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수요 요인, 그리고 재정지출 여력 제한, ICT 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 에너지 전환 비용 등 정책 및 구조적 요인을 꼽을 수 있음.
- ◎ 독일 연방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17억 유로(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간소화를 포함한 「성장기회법」을 제안함.
  - [수출입 다변화] 중국 등 대외수요 감소의 자국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상대국 다변화를 모색함.
  - [숙련노동자 유치] 「전문인력이민법」 제정을 통해 해외 숙련노동자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 한국은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 개선]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하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해가는 한편,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 [재생에너지 확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병행해야 함.
- [외국인정책 정비] 주요 선진경제권에서 숙련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함.



#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이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 ◎ [개최 배경과 의의] 2023년 9월 18~22일, 유엔은 국제사회의 시급한 개발과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선도적인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유엔 총회 고위급회의의 주간(UN General Assembly High-level Week)을 지정함.

  -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간에는 △SDG, △기후목표, △개발자원,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 △2024 미래정상회의 준비, △보편적 의료보장, △결핵퇴치 등 다자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8개 주제에 대한 정상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이 개최됨.
- ◎ [주요 의제 분석]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간에 열린 SDG 정상회의와 기후목표 정상회의는 2015년 공표된 2030 의제와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짐.

  - SDG 중간 점검의 단계에서 일부 지표는 2015년보다 더 악화되었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 평균기온이 2.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파리협정 목표(1.5도 이내)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SDG 정상회의는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2)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를 바탕으로 SDG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3) 각국 정상과 정부 수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정책과 국가적 공약을 제시하는 지도자 대화를 개최함.
  - 기후목표 정상회의는 △회원국의 강화된 기후행동(ambition), △기업·도시·지역·금융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행동(credibility),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행 협력(implementation)의 세 가지 가속화 의제에 대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선도적인 공약을 다루었음.

##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 [평가 및 시사점] 제78차 유엔 총회 기간에 개최된 일련의 고위급회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확인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자원 마련, 정치적 리더십 확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관련 논의는 개선이 필요함.
  - ‘글로벌 사우스’로 통칭되는 개발도상국은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불평등 감소, 디지털 혁신 적용,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기술 접근성 및 진입비용 지원 요구 등에 대해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유엔이 국제정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리더십을 확보하고, 분쟁 유발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평화 안보를 개선하는 데 힘쓰는 한편, 개발재원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SDG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로 SDG를 적극 활용하고, ODA 예산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의 정치 선언문과 부합하도록 향후 ODA/GNI 0.7%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kmkim@kiep.go.kr, 044-414-1507)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bgkang@kiep.go.kr, 044-414-1242)

-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기반 유지·확대 등 중앙아와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주요국은 △에너지 대체 공급국 △희소금속 생산국 △물류망 재편 측면에서 중앙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앙아와의 전략적 협력 활성화를 모색 중임.
  - 2022년 한-중앙아 교역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협력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성장하는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 파트너로서 중앙아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중앙아 5개국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2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함.

  - 중앙아의 2022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비해 높았던 이유는 △교역액 △해외이주노동자 송금액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러·우 전쟁 발발 직후 중앙아 5개국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단기 긴급 대책을 추진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뉴노멀로 인식하여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단기 긴급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식량 안보 보장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국가의 경제 기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통 산업인 농업, 에너지·자원 분야 고도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 △신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 ◎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의 경제성장 전략을 토대로 본 한국-중앙아 유망 협력분야는 △희소금속(희토류 포함) △물류망 △에너지 △관광 부문으로 판단됨.
  - 국별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는 희토류, 원자력발전소, 물류망, 우즈베키스탄과는 희소금속, 교통 인프라,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플랜트 사업, 키르기스스탄과는 스마트팜, 관광 부문의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보임.
  - 타지키스탄과는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추진 중인 무상원조를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김혁중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연원호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 (whyeon@kiep.go.kr, 044-414-1022)

- ◎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 ◎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목적임.

  - ①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제조장비들을 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② 첨단 컴퓨팅 및 슈퍼컴퓨터 관련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방향 교신속도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밀도(performance density)’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여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사전허가제를 도입함.
- ◎ 한미 정부는 기존의 VEU(Validated End-User) 프로그램 및 리스트 업데이트를 통해 당분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그러나 VEU를 통한 예외 인정은 기본적으로 미(美) BIS의 기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에 국한된 것이며, 이외의 EUV 노광장비와 같은 핵심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예외 없이 지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 ◎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및 AI 반도체 국산화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과 미국의 AI 반도체 분야 대중국 견제기조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상은 각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네덜란드·일본과 비교할 때 중국 장비업체와 보다 가까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 더 위협이 될 수 있음.
- 미국이 중국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실질 성능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통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성능 AI 연산에 필요한 HBM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p 낮춘 2.8%로 전망하며, 이는 2023년의 3.0%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당겨쓴 여력, 압박 받는 성장’이며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를 진입 △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 ◎ [선진국] 주요 선진국 대부분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미국은 2024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은 소비지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2023년만큼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며, 높은 정부부채와 이자부담 또한 재정 기여도를 낮추게 될 것
  - 유로지역은 2024년 1.1%, 영국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지난 2023년 5월 대비 모두 하향 조정함. 물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회복되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났으나, 성장 약세 기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
  - 일본은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 기업 실적 호조 등을 기반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연간 1.0%의 안정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 [신흥국] 주요 신흥국들의 2024년 전망도 대부분 지난 5월 대비 하향 조정

  - 중국은 정부의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불안요인들을 감안하여 2023년보다 하락한 4.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인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금융·정치 환경, 국제사회 분절화에 따른 수혜로 중기 평균에 근접한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여기에는 2024년 총선 전후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포함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 러시아는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가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2024년 1.0%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2024년에 2023년 대비 낮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여전히 높은 고금리와 농산물 작황의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 하향의 원인으로 판단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 ◎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IMF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부채는 GDP의 30%, 음성부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GDP의 48%에 육박(2022년 기준)

  - 중국정부는 2014년 지방정부가 지방채(공식부채)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LGFV 등 음성부채를 계속 활용
- ◎ LGFV의 채무 연체 및 디폴트 발생 시 일부 지역·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인프라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중국의 경기부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

  - LGFV의 단기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2023~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5조 5,400만 위안)여서 재융자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S&P는 LGFV 부채 조정 과정에서 지역은행이 2조 2,000억 위안의 자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인프라 투자 지출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완화 △음성부채의 공식부채(특수재융자채권) 전환 및 금리 인하·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강화 조치 등을 시행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转移支付)을 늘리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의 재해 복구·예방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보충
  - 또한 지방정부에 특수재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해 고금리·만기도래 음성부채를 저금리의 공식부채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국유은행에 LGFV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위법적으로 음성부채를 늘려 처벌된 사례를 경고 목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합병 등을 통해 LGFV를 구조조정하고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방간부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논의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

- ◎ 최근 일련의 대응조치가 당장 상황이 시급한 LGFV의 디폴트 리스크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동력을 촉진해 중국경제 활성화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분배 구조로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
  - 지방정부는 LGFV 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고, 특별국채를 활용해 재정 악화 우려 없이 인프라 사업을 확대 가능
  - 그러나 음성부채를 특수재융자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를 지연시킬 뿐이며, 예산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단은 제한적
  -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및 장기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이 지속 추진될 전망



#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이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jylee@kiep.go.kr, 044-414-1253)

**박소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연구원(sojeong@kiep.go.kr, 044-414-1241)

- ◎ [연구 배경]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ODA 지원규모 확대기조와 일치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위해 국민적 지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4년도 ODA 예산안과 지난 11년간 실시된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동 기간 유럽 지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국민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2024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2024년도 ODA 정책 방향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ODA 확대 추진’임.

  - 중점 지원 방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에 집중, △대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임.
  -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사업관리 내실화, △성과관리 체계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음.
- ◎ [ODA에 대한 국민인식] 최근 11년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개도국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와 정책 지지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ODA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국민은 사업 결과가 실제로 저개발국에 도움이 되었는지(53.3%),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45.9%)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우선 달성과제로 ‘빈곤종식’을 꼽았으며,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등을 중요한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음.

## 2024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조사의 함의

- ◎ [정책적 시사점]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리 ODA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어 국민인식 및 정책 지지도 제고가 필수적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2년 ODA에 대한 인지도는 61.5%로 전년대비 2.8%p 감소하여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인도적 지원(20.6%)과 교통(14.3%) 분야 등 상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ODA 예산 확대에 대해 찬성여론은 26.9%에 불과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전략국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이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홍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 ◎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필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군사 소통, △불법 마약 제조·유통 방지, △인공지능(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확대하는 데 합의함.
  - 그러나 양국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글로벌 안보 이슈 등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하여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마약방지 협력 및 군사대화 재개 등 비교적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원칙과 비전 제시 등 장기적·전략적인 성과를 중시함.
  - 한편 양국간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외에도,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사항 역시 미중 간 갈등요인에 따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핵심이익의 차이가 명확한 미중이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함.
  -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및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의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중시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의 재정립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미중 양국이 양국관계의 안정화, 안보와 국익의 균형 등을 모색하는 것처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중국과의 소통 재개 및 확대를 통한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균형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044-414-1037)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044-414-1234)

장한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신분야협력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8)

◎ 최근 녹색경제와 연관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탄소중립/넷제로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상품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분야(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수송, 에너지효율, 수소·암모니아)의 교역액은 전체 상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 본고는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특징(△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 친환경 인증제도 강화, △ 녹색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다자협력)을 비교분석함.

-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녹색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예산 증액,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고 기술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 의존도 축소 등을 도모하고, 타 국가의 대규모 지원 정책(미국 IRA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강화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원부자재와 재생원료 사용을 장려하고, 대체 소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표준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실증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 [친환경 인증제도 강화] 녹색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EU, 미국 등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제3자 검증을 거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방침
- [녹색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다자협력] 공공부문이 친환경성, 순환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녹색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 관련 투자와 수요를 촉진

##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 녹색 스타트업 육성, △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사용과 생산 공정 확산, △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정비 등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방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중장기 녹색 스타트업 육성 계획 수립과 민간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확대 및 세분화 (환경 개선 효과별 차등 지원 등) 검토
- 친환경 원부자재 도입을 촉진하고, 환경 및 탄소 발자국이 적은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연구·실증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규정·표준 정비 등을 추진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유망 분야/국가·지역에 대한 선택 및 집중형 지원과 국가간 상호인증이 가능한 녹색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외 녹색공공조달 활용 전략을 모색
-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유사 인증제도 정비, 그린워싱 제재 강화 등) 조성이 필요



##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jgkim@kiep.go.kr, 044-414-1093)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백중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남유진** 국제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남궁아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namku003@kiep.go.kr, 044-414-1327)

- ◎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 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 ◎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인도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핵심시장이자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동반한 중간재 중심의 대인도 수출구조가 정착
  - 한·인도 상호간에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 ◎ 인도의 높은 성장가능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분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대인도 투자가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방향과 인도의 육성 수요가 부합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 향후 제조업·공급망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협력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향방을 결정할 것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에 상기한 산업을 어젠다로 상정할 필요
  - 진영간 분절화가 참여한 첨단기술·서비스 영역(통신장비,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인도의 시장 및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능성 발굴
  - 우리나라는 대인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0억 달러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중이며,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주목할 필요
  -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신뢰도 제고는 한·인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jongduk.kim@kiep.go.kr, Tel: 044-414-1181)  
 이천기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leec@kiep.go.kr, Tel: 044-414-1361)  
 예상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이주관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Tel: 044-414-1089)  
 금혜윤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044-414-1205)

-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각각 44.8%와 37.5%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OFDI)의 경우 IPEF 참여국의 비중(2017~22년 평균)은 46.4%였으며, 2023년 상반기로 한정하면 약 60%에 이릅니다.
- ◎ IPEF 참여국들은 필라3 협정을 통해 공동의 기후목표와 탄소중립 경제를 향한 각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참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참여국들은 청정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협력하고 무공해 차량의 판매·생산·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농업·산림·수자원·해양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홍보함.
  - 해당 협정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IPEF 촉매 자본 기금(Catalytic Capital Fund)'을 설립하며, 2024년 상반기에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Clean Economy Investor Forum)'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 ◎ 필라4 협정에서 IPEF 참여국들은 참여국 전체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및 관련 금융범죄 예방과 퇴치, 조세 행정 개선,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약속함.
  - 필라4 협정에 따라 참여국들은 새로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 Capacity Building Framework)를 구축
- ◎ 필라2는 협정문 제21조에 따라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의 비준서 기탁 시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필라1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2024년에는 IPEF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으로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IPEF 네트워크, IPEF 장관급 협의체(Council) 및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가 있음.
  -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구성될 각종 협의체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구경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044-414-1271)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김영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yggkim@kiep.go.kr, 044-414-1188)  
 연원호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 (whyeon@kiep.go.kr, 044-414-1022)  
 예상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044-414-1157)  
 최원석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조성훈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scho@kiep.go.kr, 044-414-1437)  
 김혁황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hhkim@kiep.go.kr, 044-414-1135)  
 김혜윤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정민철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위원 (mcchung@kiep.go.kr, 044-414-1052)

-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에서 특히 두드러짐.
  -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임.
  - 부가가치 무역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한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국의 제조업 최종수요에 포함된 중국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부가가치액이 크게 증가함.
  - 중간재 및 부가가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 심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지 중간재 조달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해외 생산기지 및 중간재 공급처로서 중국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 ◎ 최근 미국, EU, 중국 등은 전략적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시행 중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임.
  - [미국] 2022년 10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세계 공급망 교란, 우려국의 비시장 조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공 투자의 필요성을 천명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법안을 도입
  - [EU] 통상전략, 산업전략 등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역내화를 추진 중으로, 「기후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보조금 규제완화(TCTF), 역외보조금 규정(FSR), 「반도체법」 등 EU의 정책적 방향성을 법(안)으로 구현
  -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급망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쌍순환’ 전략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 창출을 통한 ‘자립자강’ 식의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해외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공급망 역량 강화
- ◎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실질GDP는 약 1.41~1.83% 감소하여 주요 선진국 중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됨.
  - 본 분석에 사용한 METRO 모형은 OECD에서 개발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으로 64개 지역·국가의 65개 산업에 대한 자료와 OECD의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교역을 산업별·용도별(중간재, 최종재, 자본재)로 구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분석이 가능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 선진국(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간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상호의존도를 현재(2022년) 또는 마·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2017년)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2002년) 수준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를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 및 개방수준에 비례하여 부정적 영향이 크게 추정되었으며, 중국도 중간재 수입선 변경 및 수출 제약으로 인해 성장률이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전망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 ◎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으로 인한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국제공조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한 가치기반 공급자로서 포지셔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수출입 통제, 투자 통제, 공급망과 산업 육성지원 정책 등은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을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가중시키며 한국의 후생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큰바, 글로벌 연계성을 고려한 국제공조와 비경제적 목적의 정책 특징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
  - 유사입장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산업의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
  - 궁극적으로 우수한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안보, 인권, 환경 등의 가치를 모두 준수하는 가치기반 공급자(Premium Supplier)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노윤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yjro@kiep.go.kr, 044-414-1143)

김민희 델리사무소 연구원 (kmh@kiep.go.kr, +91-11-4075-8086)

- ◎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꾸준한 대외원조를 통해 빈곤과 보건 등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임.
  -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개혁과 함께 대외원조자금 및 외국인투자 등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의류 부문의 지속적 수출증대 등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등 주요 개발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총예산의 약 35% 정도를 차지함.
-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ODA 수혜국으로, ODA는 주로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경제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ODA 중 32%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 중 75%는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었음.
- ◎ 한국 역시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성장세와 그에 따른 잠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인지하며 2011년부터 방글라데시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ODA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 2021년도에 2억 3,630만 달러를 공여하며 전체 공여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공여를 방글라데시에 시행하였으며, 이는 단일 공여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 한·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최근 한국이 원조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방글라데시 개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교육, 교통, 수자원·위생, 공공행정 분야 등 원조 역량이 높은 4개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함.
- 방글라데시가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기 위해 PPP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